

더민주 전북도당 탈당계 대필 강력대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 빼가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등 집단 탈당계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4.13총선이 끝난 직후 일부 당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는 탈당계가 접수됐고, 상당수가 대필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탈당계가 접수되면 본인에게 탈당 알릴 문자를 발송하는데, 일부 당원들의 혐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동의 없는 탈당계 접수... 대필된 정황 있어 본인확인 절차 등 강화·적발될 경우 고발 방침

려졌다.

집단 탈당계는 동일 필적으로 출마자, 또는 지지자가 미리 수집된 정보를 이용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따른 고소, 고발건과 비당원이 탈당계

를 접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조직적으로 탈당계를 대필해 제출했다면 이는 당원의 다양한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지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 행위이다.

현행, 정당법 제42조 1항의 의하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당은 탈당신고서 접수에 있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고 본인 동의가 없거나 탈당을 강요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김성주 의원 양성빈 도의원 박재완 도의원

김성주 의원·양성빈·박재완 도의원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경)과 전북도의회 양성빈 행정자치위원장(장수), 박재완 도의원(완주2)이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김성주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성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성빈 위원장 역시 2년 연속 공역의원부분 유권자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 위원장은 그 동안 전북도상징물관리조례를 비롯해 전북도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 전북도업무추진비집행기준 및 공개에관한조례, 전북도 지역재난피해 지원에관한조례, 전북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등 도민중심의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고향기부제도입을 건의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방의 현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성빈 위원장은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과 무주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마련 촉구, 전북권 공학유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재완 의원은 "유권자시민행동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유권자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차대통령 13일 3당 원내대표단 회동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3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은 국회의외의 본격적인 협치(協治)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 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16년 만의 여소야대과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이 재편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립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11일째 발표될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초청대상이다.

박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 모든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번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대(對)국회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총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라 3당 대표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 대표 역할을 맡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늦어져 원내대표단 회동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단 회동과 관련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의외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민생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을 전할 전망이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휴회동서 가슴기 피해 재발방지책 주문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총선 민심을 전달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을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회동을 위한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의제 조율을 거쳐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 대변인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기본 생각은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데 의제를 국한할 필요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모든 얘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민주의 이외에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세월호 특별법 시한연장 등을 주문할 방침이라는 게 기 대변인의 설명이다.

기 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부 책임과 잘못은 없는지 꼭 따져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식적인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왼쪽부터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단속은 어떻게?... 실효성 논란 가중

적용 대상 300만~400만명에 사안 '천차만별' ... "현시스템으로 감당 어려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이 지난 9일 발표됐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은 300만~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한액(3만원)을 초과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5만원 초과), 경조사비(10만원 초과)를 건네는 제공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 적용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문제는 실제 위법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 감시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고나 내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전 감시와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각 기관마다 감사실이 있고 감찰 활동을 벌이지만 매일 현장에 나가 일일이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물이나 청탁, 금품을 건네는 일 등을 주변에 소문을 내며 할 사람은 없다. 때문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속 망에 걸릴 대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익신고나 내부고발 등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품의 종류부터 가격, 모임의 성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기관들이 저마다 조사에 나서면서 '실적'을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령안 발표로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기보다, 오히려 파도란 법적 한계성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주 기자

더민주 초선워크숍 참석률 80%... 지각도 많아

우상호 원내대표, "당 활동 불성실하게 하면 상임위 배치부터 불이익 주겠다"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 모임에 전체의 80%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는 김중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임채정 상임고문을 비롯해 초선 당선인들이 참석했다.

전체 57명의 초선 당선인 중 80.7%인 46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다만 행사 개최 때는 전체의 절반인 29명이 도착했고 지각한 당선인들은 행사 도중 속속 도착했다.

당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서 교통체증으로 당선인들의 도착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록 이번엔 급하게 연락을 드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늦게 진행됐기 때문에 촉박한 시일이긴 하지만 첫 워크숍부터 지각을 하거나 아직까지

이 시점에도 도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국회의원 준비 첫발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모습으로 국회를 시작하면 앞으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하고 결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경고하겠다. 앞으로 당 활동에 결석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활동을 하면 상임위 배치부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구 일정, 개인 일정, 당 일정 사이 많은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이 될 수 없고 집권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나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안일 때는 무조건 국회 일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이날 행사는 임채정 고문의 '제20대 국회 목표와 과제, 의정활동의 이해' 발표에 이어 우원식 의원의 민생입법 성과와 과제, 이지로위원회의 1000일 대장정 발표, 원내 현안보고와 상임위 소개, 초선 당선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직 국회의장인 임 고문은 "정치가 변화의 대목에 와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된다.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우리당으로선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만큼 앞으로는 여러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현안 토론회를 거쳐 오후에 제20대 국회에 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일하는 국회,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생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성주 기자

이상돈 "어버이연합 뿌리는 MB 정권"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0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어버이연합" 그 뿌리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당선인

이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 '신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의원이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호위대라고 했는데 (실제는) MB정부가 거들러 올라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2008년 촛불시위 때 맞불시위란 게 있었고, 어버이연합이 MB정부 내내 정부 옹호 시위에 앞장섰다"라며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하는 시위도 거의 거기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내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그런 시위에 타깃이 됐다"면서 "제 학교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르신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심지어 제 아파트 앞에서도 시위를 했는데 이런 시위가 자발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의혹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배후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은 시위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시위에는 돈이 들기 때문"이라며 "내가 시민단체나 교수들과 낙동강이나 이런 4대강 현장에 가면, 어디서 알고서 그런 나이든 분들이 모여서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랬는데 그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와 관련된 기관과 끈이 닿아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이성주 기자

안철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여야 따로 말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0일 "민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따로따로 맡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회동에 관해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한단계씩 실천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본다"며 "실제로 만남에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당 사무총장직 인선에 관해서 "여러가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8석의 현역 의원들이 1인 2억·3억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현역들은 현역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국회직 일에 집중하고 가능하면 당직은 원외 인사들로 중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처한 여러 상황에 맞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성주 기자